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: DPRK 지도층에 형사 책임을 물을 때이다

도쿄(2016년 1월 22일)—다시 한 번 일본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(이하 “DPRK) 인권 특별보고관으로는 마지막 공식 방문입니다. 지난 6년 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해주신 일본 정부에 감사드립니다.

이번 방일에 앞서 최근 DPRK는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. 안타깝지만 국제사회에 가하는 폭력이라 간주될만한 이런 행위는 DPRK 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DPRK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으나, 노력이 빛을 잃게 만드는 행위입니다. 따라서 국제사회가 (인권 침해) 책임규명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, DPRK와 인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

지난 5일 동안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나고,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도 결실있는 대화를 했습니다. 또한 외무상, 납치문제 담당상, 내각 정보조사실,

외무성, 내각 납치문제대책본부 고위급 관계자 및 국회의원과도 만났습니다. 감사하게도 법무부, 대법원 및 경찰청 관계자와도 면담을 했습니다.

오는 7월 특별보고관으로서 제 임기가 마무리됩니다. 지난 6년동안 DPRK 내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 의제로 한층 더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. 2015년 12월 10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재차 DPRK 내 인권 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. 같은 해 12월 17일 총회에서 193개국 UN 회원국 중 119개국의 찬성으로 DPRK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. 여러 관계당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했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.

DPRK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. DPRK에 인권을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, 더하여 이제는 DPRK 지도층에게 형사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때입니다. (DPRK 내 인권)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지 2년 가까이 지났으나 DPRK 내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.

이에, 이번 방일동안 법집행기관과 국내 및 국외 책임규명 사안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눴습니다. 법무부, 대법원 및 경찰청과 유익한 면담을 했습니다.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면담동안 관련 법적 틀(framework)과 DPRK 내 증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향후 조치 및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.

납치 피해자 가족 및 납치문제 담당상과 면담 시 일본 국적자 납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.

이 자리에서 강조컨데, 당시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DPRK가 일본인 납치에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인지를 하고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기에, 당연스럽게도 DPRK가 지금까지도 일본인 납치에 연관이 있으리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일본 국적자뿐 아니라, 가능하다면 그외 타 국적자 납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(settlement)하는 정의로운 대의를 추구하기 위해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.

근본적으로 납치는 강제실종의 한 형태로 진행형 범죄입니다. 납치 피해자 가족이 사랑하는 이의 소재를 파악하고, 생존 피해자가 있다면 가능한 경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지만 종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.

납치 문제 해결은 시급합니다. 피해자 가족은 고령자가 되었습니다. 2년 전 일본과 DPRK가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양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에 상당한 실망을 표합니다.

DPRK로 하여금 양자 합의 때 약속한 바를 이행하고 일본과 DPRK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합니다.

납치는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룬다면, 신뢰를 쌓고 선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신뢰 조치와 함께 향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선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
UN 회원국은 UN 헌장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, 신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.

DPRK는 정식 회원국이라면 당연하게도, 헌장과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
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.

특별보고관으로서 마지막 방일입니다.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년 간
변함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신 분들 모두, 그리고 시민사회 및
일본 정부에 감사드립니다.

끝